

A close-up portrait of a middle-aged woman with short, wavy brown hair, wearing large, light-colored round glasses and a pearl necklace. She is smiling and wearing a dark purple blazer over a white top. The background is a soft-focus outdoor scene with greenery.

생명이 존중되고
평등이 이뤄지며
평화가 실현되는
희망의 정치—

박 영 숙

의정보고서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민주당**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1987년 11월 22일 정계에 입문한 이래 그리고 13대 국회의 회기동안 정치 초년생인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3대 국회가 상반기에는 여소야대구도였으므로 민주개혁입법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나 민자당 3당합당 이후에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3대 국회는 국민 주권 회복, 양성 평등 지향, 환경의식 고양이라는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7년만의 국정감사부활과 30년만의 지방자치제 실시, 환경관련 법안의 제정 또 37년간 2천만 한국 여성의 소망이었던 가족법과 남녀고용 평등법을 개정하고 탁아문제에 국가 예산이 지출되는 등 13대 국회는 여러 부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국 의회사, 한국여성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중 보건사회위원으로서 여성권익 향상, 환경문제 해결, 사회복지와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제가 30여년간 여성운동에 참여하면서 늘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선으로서 노련한 행정관료들과의 씨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당하지 못한다」는 신념아래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비교적 성과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3대 국회동안 가장 보람있었던 것은 가족법 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과 환경관련법을 여성단체와 환경단체의 지원과 당지도부, 동료의원들의 협조 아래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한 정당이 여성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보다 가장 진취적이라는 생각에 늘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마치면서 한가지 아쉬운 것은 14대 국회에 여성의 의석수가 줄었다는 점입니다. 여야를 망라해 여성출마자 전원이 낙선하였고, 전국구 의원 역시 13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해서는 각 정당과 의원들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단체 또한 여성정치 참여를 위하여 그동안 정당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이었던 자세를 벗어나야 하며 여성정책의 실현과 여성관련 입법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정당의 적극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비록 원내에서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사회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한 각종 제도마련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려 합니다.

14대 총선후 세간에 '여성후보는 여자들이 안찍는다' '여자는 역시 역량이 모자라는 것 같다'는 말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성들은 향후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2000만 여성의 명예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도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90년대 최대의 여성운동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3대, 14대에 이어 15대에는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대표 등 각 계층별, 직능별 여성대표들이 의회에 대거 진출하여 여성의 평생, 평등 노동권을 이루아내고, 여차이기 때문에 어린이, 노인할 것 없이 성폭행 당하여 강간을 세계 3위라는 수치스러운 풍토가 바로 잡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13대 원내활동의 경험을 살리면서 지금까지의 경제개발위주의 정책을 사회개발도 조화있게 이룩하는 정책으로 유도하기 위해 환경, 사회복지 그리고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활동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계속 격려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평등, 평화 - 박영숙의원의 정치관



그래서 평민당이 창당한지 11일만인 11월23일(1987년) 평민당의 부총재로서 또 대통령 선거대책위의 부위원장으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 자라면서 정치가가 될 생각을 하셨습니까?

▶ 여성으로 태어나서 정치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어머니께서 '여자도 사회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YWCA에서 여성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운동 중에서도 특별히 시국문제나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등 진보적 입장을 띄어 왔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 YWCA에서 일하면서 사회문제에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민주신학자이면서 유신체제하에서 해직되고 투옥되는 인권탄압을 체험한 남편(전 한신대 교수이며 한국신학연구소 소장을 지낸 안병무 박사)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 어떻게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까?

▶ 87년 11월에 출범한 평민당이 정책정당을 표방하면서 여성계에 부총재 1명, 당 지도위원 2명, 당무위원 2명 그리고 전문위원 1명 등 모두 6명의 추천을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뢰해 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민중을 기반으로 여성해방을 이루려는 30여개의 여성단체들의 결함체인데 그 무렵 내부에서 이제는 우리 여성들도 결의구에 들어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맞아 떨어지자 공식적인 결의는 아니었지만 당시 여연의 수석부회장으로 있던 제가 평민당에 가담해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오랫동안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에 관여한 사람이 정치에 입문할 때 남다른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입당 하셨습니까?

▶ 우선 여연 내부에 평민당의 요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평민당이 분당되어 창당한지 2주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당으로 모습을 드러낼지도 불투명한 시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당시 비판적 지지의 입장에 있던 저로서는 어려울 때 함께 당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참여의 자세라고 보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민당이 창당한지 11일만인 11월 23일 평민당의 부총재로서 또 대통령선거대책위의 부위원장으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 대개의 경우 여성들이 정치입선에 나서려 하면 가족의 반대가 심해서 좌절된다고 하는

국민들이 정치인을
도매금으로 불신하는
풍조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데 박의원의 가족은 어떠했습니까?

▶ 아마 내가 개인의 입신을 위해 정치에 나서려 했다면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들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일이며 민주화운동의 연장이라고 여기고 허락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나의 진로를 놓고 세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첫째는 정계에서 다시는 재야운동가로 되돌아올 수 없는데 40년의 재야활동에 미련이 없는가, 둘째는 협력관계가 아닌 경쟁관계로 이루어지는 정치권에서 건널 수 있는가 셋째는 조직우선과 절대복종이 강요되는 조직생활에서 자율성을 억제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점이었습니다.

○ 국회하면 당리당략과 권모술수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 직접 경험해보니 과연 그렇던가요?

▶ 저도 밖에서 볼 때는 제대로 하는 일 없이 세비나 축내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와보니 일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게다가 행정부의 비민주적인 정책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점차 많아지고 야당에 대한 탄압도 심해서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생활입니다. 어려운 결단의 순간을 함께 하면서 상당수의 정치인을 존경하게도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도매금으로 불신하는 풍조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계에 입문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의원이 되시니까 약자들을 대변할 힘이 주어지던가요?

▶ 88년 12월말에 있었던 대규모 시민 조치에서 장기수들이 제외되었는데 그것에 항의하던 이들이 여러 경찰서에 분산 연행되었을 때라고 기억합니다. 연행자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연행자 면회와 그들의 처우개선을 경찰당국에 요구하여 관철시켰습니다. 만약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서술이 시퍼런 경찰에게 나도 마찬가지로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을텐데 국회의원이 되니 과연 말발이 서더군요. 한때는 사람들을 작은 일에서나마 도울 수 있었다는데 처음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성전체의 권익을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고, 오랫동안 끌어왔던 가족법이 개정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적인 동료 남성의원들과의 연대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많은데 소수인 야당이 일을 해내려면 이익단체들의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 혹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까?

▶ 민주당이 3당 합당한 이후에 모든 법안이 관반토론도 없이 날치기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입법부의 일원임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법도 아니고 사회복지관련법조차 여야 합의없이 통과되는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소야대 시절에는 그래도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되는 일이 없으니 의미가 없었지요.

○ 그렇지만 가족법 개정과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의 공을 인정받아 지난 3월에 열린 한국여성대회에서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셨는데 그간 그동안 박의원이 여성들의 대변자로 제 몫을 했다는 평가가 아닐까요?

▶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지만 늘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상을 받았을 때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민망하고 당황했습니다. 정신대의 역사를 폭로한 김학순 할머니와 공동수상을 했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자신의 삶을 일제에 의해 송두리째 빼앗긴 채 한때는 일생을 살아왔던 분의 용기와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성들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내는 데는 여성의 의회에서의 활동이 긴요하다는 인식에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 보사위에서 활동하면서 환경문제가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을 뿐만 아니라 '녹색의 전화'를 만드는 등 환경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셔서 환경기자클럽에서 뽑는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환경에 남다른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70년대에 교회여성들과 함께 생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나 자연 모두가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지요. 국회에 들어와서 원전레이온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터져 진상조사단장을 맡았었는데 피해보상을 위해 뛰어다니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때 상봉동 연탄공장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진폐증에 걸린 사실을 놓고 씨름하게 되었는데 정부의 환경행정이 정말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예산 중 환경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터무니없이 작고, 폭주하는 환경관련 민원에 비하면 환경처(당시는 환경청) 위상이 형편없이 낮고, 비민주적인 행정관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환경오염

참된 정치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하는 과정이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자체 실시이후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 대한 정보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상의 환경운동이지요. 앞으로 국회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입니다.

○ 이번 14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엄마는 4년동안 참아왔습니다”라는 홍보물이 여성들의 물가문제에 대한 인식에 충격을 준 것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의 특기할 점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입후보자들이 한결같이 탁아소 설치와 기혼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등 여성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공약들을 들고 나오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저도 “여성유권자 과연 봉인가”라는 주제의 방송을 하면서 여성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계에서 느끼시는 바는 어떠하십니까?

○ 저 개인적으로는 지자체 실시 이후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후보자로 선거를 치른 분들은 아직도 여성들의 정치적 의식에 상당한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돈이나 향응이 먹혀들어간다는 거지요. 하지만 두 차례의 지자체 선거와 총선을 지원하면서 여성들이 분명 달라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많은 자성과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단체나 정당들이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관심을 더욱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지역사회의 여성지도력으로 키워야 하고 여성 유권자들을 선거때 일당 얼마주면 구할 수 있는 유희인력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야당의 경우는 정치자금에 여의치 않아 지속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 요즘 여성화에서도 남성의 가정화와 여성의 사회화가 되어야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된다고 주장하는데 정치권에서 여성의 참여가 정치민주화와 당내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여성계에서는 이번 14대 국회에 여성참여가 저조한 것을 보고 각 정당이 여성에 대해 보수반동적인 성향을 띠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야 할 것 없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14대 총선에서 여성출마

우리 여성들이
언제 정치적인 훈련을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
정치적인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요.

자들이 모두 낙선한 것을 보고는 ‘역시 여자는 안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성 후보가 낙선하면 패인을 정치권 상황이나 조직관리면 등의 이유를 들지만 유독 여성에게는 마치 여성 유권자들이 시기질투로 여성을 안팎은 것처럼 여자는 할 수 없다고 비난합니다. 우리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른과 어린이에 비교할 정도로 열악하다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우리당도 여성후보에게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여성후보들은 공천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민주당 내민주주의 정치구도 속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만 그러다 보면 여성들이 들어설 틈은 늘 없지요. 공천때마다 이런저런 이유가 안생기겠습니까. 공천이 각 정파의 이해 관계 때문에 밀리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실용을 받았지요.

우리 여성들이 언제 정치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교육이나 학교, 사회에서 정치에 여성의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키워지지 않았습니까?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 정치적인 능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지요. 마치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게을러서, 능력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물어부치는 부자들의 논리와 다를게 없어요. 따라서 각 정당들이 말로만 여성공약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당내 여성지도력들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마 민주당도 여성당원이 훨씬 많을 걸요. 그렇다면 당활동에도 여성당원활동에 좀더 많이 할애되어야 합니다. 당지도 마찬가지로요. 국민의 절반이 여성인데 그들을 제외한 정치가 온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선거에서 전국구나 지역구로 나오지 않아 여성계에서는 참 아쉬워했습니다. 막상 의원직을 놓게되니 본인과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지요. 지역구 출마를 위한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원내 활동에 치중한 이유도 있지만 솔직한 고백을 하려면 오늘의 정치와 선거풍토에서 저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남성의원들처럼 동문이나 친지들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여성의원들의 현실이거든요. 이제 막상 의원직을 놓게 되니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요즘은 그동안 정치하고 야망한다고 거리를 두던 여성단체들도 저를 토론회 등에 초청도 합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선거운동에 출마나 15대에는 꼭 출마 하라는

여·성·이·있·는·정·치

여성의 삶의 조건은 여성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창출됩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검증해 보기 위해 15대에는 출마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여성운동을 함께하는 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해 볼만 합니다.

○ 여성의원에 대한 여성들의 지원은 어느 정도인가?

○ 남성들은 선후배끼리 서로 지원을 잘합니다. 이것은 험난한 인생에서 서로 공존해야 한다는 철박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지원해야 살아남는다는 경험을 체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은 정치집단을 통해서 여성의 이익을 얻어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전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법 개정 당시 평민당에서 정말 개정을 위해 애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고 나서 고맙다는 인사 전화 한 통 당으로 걸려오지 않았어요. 당지도부가 저에게 여성들이 가족법개정을 정말 원했느냐고 묻더군요. 다른 집단들은 그들의 문제를 도와주었을 때 곧 반응이 있거든요. 저나 여성계가 정치적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5대까지 4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가져왔던 여성, 환경,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좀더 연구하려 연구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자치활동이나 여성의 정치지도력 개발을 위한 교육도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물론 혼자서는 못하지요. 범여성적인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 13대 국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과 민간단체들의 중간에 서서 서로의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원으로서 당에 봉사해야지요. 저는 늘 이 민자리에 있는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활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역이 아니지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일해야지요. 진짜 전문가가 되도록 더 공부하면서 못다 읽은 책도 읽을 것입니다. 그동안 격려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맺힌 사람들의 소원을 풀기 위하여

제가 국무위원 앞에서 제 심정의 일단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이 일론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재야에 있었을 때에는 경찰서 과장 면담조차도 번번히 입구에서 거절되었고, 때로는 머리채가 잡힌 채 담장차에 실려서 시내 외곽으로 끌려가거나 경찰서 안으로 끌려들어가는 경험을 여러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따지고 추궁하는 자리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심정에서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우리 함께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호소합니다.

저는 이번 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듯 선전하고 있으나 그 어느 곳도 병들지 않은 곳이 없고, 날로 병이 심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나라 사회문제의 발생 근본원인은 바로 이 나라의 분단 상황입니다. 분단 40년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역대정부는 분단상황을 정권유지의 담보물로 이용해서 국민을 위협하고, 폭력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비판도 허락하지 않고 탄압하여 이 나라를 온통 상처투성이의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늘어나는 것은 권력의 비리요 그 비리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 희생자들이 한맺힌 사람들로서 위정자들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새 공화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먼저 한맺힌 국민이 없는 사회, 폭력이 없는 사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복지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오늘날 이처럼 안정을 잃고 있는 것은 한맺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한맺힌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야 합니다. 한을 풀다는 것은 원한에서 풀려나서 평화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의 대화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어렵게 공부시켜 좋은 대학에 보냈던 자식이 조국통일을 외치며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비보를 듣고 가슴을 찢어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 자식에 대한 부풀은 기대를 아들의 시신과 함께 차가운 땅속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의 애통함을 저는 한이라 생각합니다. 그 한은 바로 자식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풀릴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나라에 한맺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엇때문에 그토록 가슴앓이를 해야만 하는지도 아십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한을 외면한채 우리는 온 국민이 그토록 바라고, 회개해온 안정사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 개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이하 생략)

— 제 142회 임시국회 | 사회문화 대정부질의중에서 88.7.8 —



제142회

대정부 질문 88. 7. 8

□ 서준석씨 증언에 의하면 함께 감호소에 있던 구금자는 51명이었는데 그들의 평균 연령이 64세이며, 그중 상당수가 30여년간의 구금생활로 병을 얻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다. 그들을 내놓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밝혀라.

□ 최부탄 희생자 고 이한열군 부모가 제기한 가해자 색출과 국가배상청구를 지방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했는데 그 이유를 밝히고, 6천4백34명의 최부탄 희생자들이 청구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처리를 밝혀라.

□ 김근태, 이태복, 이을호씨 등의 고문사건 처리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받은 사람수와 사망하거나 불구자가 된 사람들의 구체적 현황을 밝혀라. 또 범죄비행개요라고 해서 컴퓨터에 기록된 사실을 백지화하고, 그들에 대한 피해보상책과 명예회복책을 밝혀라.

□ 전두환정권은 대간첩작전에만 투입하든지, 명칭을 바꾸고, 폭력성을 노출하는 백골단은 해체되어야 한다.

□ 단 하루에 31억 천여만원어치의 최부탄을 사용한다는 자료를 읽었다. 그리고 6,438명의 사상자를 내고, 그 독성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 최부탄 사용금지선언을 하면 그 효과가 6.29 선언에 비견될 것이다.

□ 균형있는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희생물로 노동자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구로공단의 「불우연」 집단중독사건, 문송면 군의 수은 중독사건 등 직업병 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와 각 국립병원에 직업병연구소와 전문치료 센터를 건립하라.

□ 매춘여성만을 범죄자 취급하는 현행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개정하여, 중간착취 방지, 미성년과 여성의 인신매매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라.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1차적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항체검사를 실시하라.

□ 경제개발5개년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복지증진5개년계획도 함께 세워라. 지방복지행정을 내무부로부터 분리시켜 보건부 주무부서로 일원화해야 한다.

□ 총리 취임 이후 국무총리 산하 인권보호 특별위원회가 몇차례 모였으며, 어떤 일을 했는가?

□ 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밝히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총리견해는? 앞으로 제2정무부장관을 여성으로 하는 것을 제도화 하라.

제148회

대정부 질문 89. 5. 15

□ 노태통령이 선거 때와 취임 후에 수차례 걸쳐 약속한 경제분배의 실시를 국민생활의 기본 문제별로 소상히 밝혀라.

□ 현정권은 경제인으로부터 500 여억원의 중간평가자금을 거두었다고 한다. 야당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조사와 위협을 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입법도 늦추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라.

□ 사실과 전혀 다른 5월 총과업성을 누가 유포시켰는가. 이는 정부내 반민주수구세력이 5공 회귀를 노리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음모이다. 이를 목표로 만들어진 공안 합수부를 즉각 해체하라.

□ 입사부정 재단비리와 관련 시위가 있었던

모든 대학과 부산 경희여상 등 14개 중·고교의 사학비리 실상을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아울러 현재의 입시제도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학교육문제해결 대책을 밝혀라.

□ 4.30 여의도노동자대회를 주최측에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고, 우리당도 이를 확인했는데 원천봉쇄한 것은 개정된 집시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앞으로 평화 시위는 새로 제정된 집시법에 의해 누구에게나 허락하여야 한다.

□ 최부탄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내무부장관이나 그가 임명한 공무원의 승인이 있을 시 사용토록 규제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을 빨리 제시하라.

□ 이철규군 사망원인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5공 치하의 35건이나 되는 의문사건 진실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특별 조사단을 설치하라.

□ 민주국가치고 공무원노조를 금지한 나라는 없다. 따라서 교사들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노동단결권과 교섭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 현대중공업, 서울지하철 등 노사 분쟁과 관련하여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수배자에 대해서는 수배해제를 실시하라. 아울러 노사분쟁에 대한 정부의 편파적 태도를 시정하고,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 대책을 밝혀라.

□ 전민련 탄압을 중단하고 고은씨 등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 평화연구소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는데 반전반핵을 반국가적이며 이적행위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 원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체르노빌」 「드리마일」처럼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우리나라 영광 11, 12호기는 안전상 큰 문제가 있던 것으로 전문가들도 건설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요구하고, 우리나라에 38기의 원전을 세우겠다고 보도된 것에 대하여 답변하라.

□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남녀평등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비민주적인 가부장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족법 개정의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남녀평등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비민주적인 가부장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라.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라.

□ 160개국 이 참가한 올림픽에서 4위를 얻어낸 이 나라가 여성의 지위는 99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4위로 대만과 싱가포르에 훨씬 뒤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권의 증진과 복지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기구와 제2정무부의 기능을 합병해 여성부를 신설할 용의는?

□ 여야 4당 합의로 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보사부장관과 총리의 탄핵사태를 몰고왔는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 고아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입양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입양알선기관의 비리를 조사하라.

□ 최근 교수들로 구성된 공·민영방송 제도 연구팀과 채널특성화방안 연구팀이 발표한 방송의 정치로부터의 독립, 사적 이윤 추구의 배제, 교육방송의 독립성, 방송광고공사 폐지 등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CBS의 강원도 등 난청지역의 지

방방송 설립허가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라.

□ 퇴폐향락산업의 규제, 반대업소 근절, 음란도시와 음란공연물의 척결, 마약사범의 근절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제151회

대정부 질문 90. 11. 24

□ 범죄와의 전쟁 선포후 구속된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숫자를 밝히고, 대통령에게 이들의 석방을 건의할 용의는?

□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집단시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감시원제도를 도입하고, 관계부처의 고위간부들이 정기적으로 문제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제도화할 용의는?

□ 총리는 군산시민의 TDI공장 이전요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

가? 9만5천명의 시민이 서명한 재청원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TDI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군산시민들의 청원을 과감하게 수용할 용의는 없는가? 내무부장관, 전북지사, 군산시장을 해임시킬 용의는?

□ 덕유산 국립공원내 무주리조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비호한 전북지사를 해임할 용의는?

□ 2030년까지 50기의 핵원자로를 건설하고, 이중에 9기의 건설예정부지는 서해안지역에 이미 확보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현재 마련중인 핵발전소의 추가건설계획과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 그리고 이미 확보된 핵발전소 건설예정 부지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핵발전소 추가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

□ 그린벨트내 용도별 토지형질변경 현황과 50대 개발의 토지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그린벨트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재조정하거나, 헌법 제23조 3항에 의거 피해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 중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

□ 앞으로 얼마나 더 골프장을 허가할 것인가? 골프장 허가를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92년까지 전국 상수원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고 한 노태통령의 약속은 실현 가능한가?

□ 지난 8월6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팔당호 시험준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총리가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서울시장도 골재채취에 동의했는가? 정부는 1,500 만 수도권 주민들의 수돗물보다 값싼 골재 공급이 더 중요한가?

□ 야당의 자료협조를 거부하도록 경기도에 지침을 시달한 중앙은 어디이며,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오염에 관한 정부자료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환경오염에 관한 정부자료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무원도 대동하게 진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을 개정할 용의는? 총리의 환경철학은?

□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여성지위향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부처간 조정, 통폐합기능을 갖춘 대통령 직속기구로 승격시킬 용의는?

□ 정부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반대하는가? 정부의 지방의회 여성참여 방안은? 가족법의 후속조치로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는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할 용의는?

□ 민간탁아소의 폐쇄조치를 철저히 하고, 지원육성할 용의는 없는가?

□ 정부가 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동일노동, 동일 임금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 시행령을 다시 개정, 보완할 것인가?

□ 대졸 여성의 취업 확대방안은 무엇인가?

□ 정부는 노령수당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가? 91년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 작년 3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국민의료보험법 제의 요구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철회할 용의는?

□ 금년초의 농어촌 의료보험 인상을 한자리수로 다시 조정할 용의는?

□ 노조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제한하라는 노동쟁의지침 마련 사실 있는가?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한 회사를 노사관계 질서문란업체로 지정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취했는가?

□ 지배주주의 추천권만 가진 공보처가 태영을 새 민방의 지배주주로 결정한 법적근거는? 방송국의 설치, 허가는 체신부장관의 소관사항이 아닌가?

□ 지배주주의 선정 기준을 신청서접수후에 결정한 이유는?

□ 민영방송의 주식배분 비율은 당해법인이 사회의 고유권한인데, 공보처장관이 지배주주 30%, 대주주 7% 등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최장관의 직권남용 아닌가?

□ 기독교방송같은 비영리단체를 제쳐놓은



제, 방송에 문의한이요, 재무구조도 부실한 태영을 지배주주로 선정할 이유는?

□ 95년부터 직접통신위성사대가 되면 방송구조도 전면적으로 개편될 수 밖에 없는데, 서둘러서 민영방송을 설립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 지방 MBC 주식반환소송이나, 동아방송

양도창구소송이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그 결과를 보고 민방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 주식회사 태영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여당의원 중 주주선정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압력을 가한 의원은 없는가?

그는 여성이 정치를 하면
정치가 맑고 깨끗해지겠구나!
라는 신뢰를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박영숙의원을 '92년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박영숙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할 이유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바람직한 여성 국회의원 상'에 대한 하나의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박영숙 의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성의원들의 바람직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가부장적 의식과 관습에 의해 가정과 사회에 공헌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받고, 착취당하며,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이 억압당하고, 소외당한다는 것은 '국민의 반'이 그러한 처지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권익과 복지증진은 여성의원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모두의 의무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국회는 부질한 여성억압이 있는 의원의 특별한 노력이 없이는 여성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몫은 일차적으로 여성 의원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원이라고 모두 여성억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지만 '남성의 기득권'을 누리려는 여성 또는 기득권자인 남성에게 밀려지지 않으려고 몸조심하는 여성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에서 박영숙 의원은 가장 소신있게 억압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가부장적인 의회를 여성운동의 장으로 삼아 개혁해 나가는 역할까지를 스스로 담당해 왔습니다.

둘째, 소속 정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여성대중과 국민대중의 요구를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입니다. 오히려 여성과 국민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용기를 내어 소속정당에도 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국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항상 연구, 조사하여 전문성을 성실히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난 4년동안 박영숙 의원은 대정부질의, 보사분과 활동, 국정감사, 예산심 의원의 업무를 맡으면서 날카로운 문제지적과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성실성을 보여주었으며, 현장 오

염, 대구폐물사건, 제주도개발 특별법 등에 발 벗고 누구보다 사건의 현장에 먼저 뛰어가는 성실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넷째, 제비만으로 생활하는 깨끗한 의원입니다. 이권개입, 청탁, 뇌물...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챙기는 의원상에 국민들은 염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영숙 의원은 재정적으로 깨끗한 의정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도 눈치보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바람직한 여성의원 상' 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국회의원 상'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평가받으려면 남성보다 더 잘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박영숙 의원은 어느 남녀 국회의원보다도 가장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과감으로써 일반대중의 눈에도 '훌륭한 의원'으로서 비추어졌으며, 이것은 그동안 "여성정치는 정치에 적합하지 못하다", "여성은 능력이 없다"는 편견을 깨고 "여성이 정치를 하니, 정치가 맑고, 깨끗해지겠구나!"라는 신뢰를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말한 '바람직한 의원'들로 국회가 구성될 때 우리 정치가 민주화되고, 부패하지 않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여성'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박영숙 의원은 이를 위한 훌륭한 기초를 놓았고 생각하면서 그 공로를 기리는 뜻에서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박영숙 의원을 선정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을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선거시기가 끝난 다음인 내년 수상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오히려 '선거시기'에 하는 것이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유권자들도 여성의원후보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며, 또한 여야 각 정당들이 전국구 후보선정에서도 어떤 여성들을 선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바른 지침을 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올해의 여성상 추천사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에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계획을 추진하라

제주도 개발 특별법은
외지인 개발 특별법이다.
제주도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므로
법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 제주도민들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외지인개발특별법이라고 절대다수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정의 졸속추진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제주도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할 때까지 제정을 유보하라.
- 안전도 사태를 거울삼아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선정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여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에 핵폐기물처분장건설계획을 추진하라.
- 전문가들은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소규모 수력과 태양열 조력 발전의 대체에너지 이용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대체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 보다 핵발전소 증설사업에만 열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90년도 대한변협의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3당합당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여소야대 4당체제에 비해 두배이상 증가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대검찰청이 골프장건설반대, 쓰레기 매립장 건설반대 등 지역주민들이 피해예방을 이유로 집단시위를 일으키거나 개입하는 주민은 구속을 원칙으로 집단민원의 배후를 일제 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하였다. 집단민원의 배후는 골프장건설 기업주와 그들을 비호하는 공무원이 아닌가? 이에 대한 시정요청은?
- 89년 7월부터 91년 9월까지 모두 55개 지역에서 21,416명의 주민들이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을 환경처에 제출했다. 주민들의 집단 시위는 여러차례 정부에 탄원해도 관계부처끼리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민원처리를 무한정 뒤로 미뤄 일선 행정기관이 오히려 기업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행정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직무유기를 이유로 해당 공무원들

처벌한 일이 있는가?

- 지난 10월 10일 진주전문대의 학생 회장 선거에서 운동권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대학내 폭력조직이 운동권 후보의 여학생 선거운동원에게 강간하겠다고 협박한 것과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운동권후보의 가해자들은 그대로 둔 채 피해자측의 학생들만 18명이나 무더기로 구속했다는 사실인가?
- 얼마전 경남 진주 경상대 일부 학생들이 지리산 계곡에 모여 화염병 던지기 연습을 하며 빨치산식 게릴라훈련을 해왔다고 발표하여 충격을 주었다. 학생들의 지리산 종주 등반과 단합을 위한 아침체조를 과대포장하여 대학생들을 마치 정부에 맞서 무장 폭력 혁명을 준비하는 내란 음모단체로 매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 작년도 9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환경처 요구액 대비 44%나 수질보전 예산을 삭감했다가 폐물사건이 터지자 본예산의 70%에 가까운 추경예산을 뒤늦게 편성해 집행했다. 내년에도 급년처럼 대형사건이 터진 후에 그때 가서 추경예산에 삭감부분을 반영할 계획인가? 언제까지 본예산삭감→대형사건발생→추경예산편성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생각인가. 이제라도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켜서 경제 개발부처와 대등한 위상에서 개발과 환경의 실질적 조화를 추진할 용의는?
- 환경청이 처로 승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수없이 지적해온 고질적인 문제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가 알고 있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고 책임중에만 별사고 없으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와 책임중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승진하는 단기 업적주의와 함께 관계부처협의 때마다 나타나는 부처 이기주의와 할거주의 등으로 굳어진 행정의 비효율성과

거의 모든 부처가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대중화 정책을 철회하고 관계법률의 개정과 피해사항을 조사하라

비민주성은 정부 스스로도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비전문성을 낳게된다. 이것은 다시 즉흥적인 여론무마용 전시행정으로 연결됨으로써 시행착오와 예산 낭비라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론 아니라 정부마저 스스로 환경 관계법을 위반하고 상황에 따라 대상만 바뀌는 정경유착의 부도덕성까지 겹쳐 현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들은 지금 심각한 몸살을 앓고있다.

- 지난 3월 폐물사태에 관한 보사회 회의에서 허남훈 당시 환경처장관은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금년 7월부터 총량규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상공부는 총량규제실시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반대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근거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기 바란다.
- 일본의 신간선 소음·진동피해에 관한 집단민원사건에서 보듯이 경부 고속전철이 건설되면 서울, 대전, 부산 등 시·도와 3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진동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양천구 신월3동 비행장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질의 (156회 정기국회)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논란이 많은 경부고속전철문제나 제주도민과 대통령이 대치하고 있는 제주개발 특별법 제정문제 그리고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골프 대중화정책의 추진문제 등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은 도의시되고 일사분란한 명령 복종체계에 의해 효율성과 충성심만이 강조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 그러나 군법에서도 위법부당한 명령은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를 건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무위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촉구한다.

- 체육부, 건설부, 농림수산부,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환경처 등 거의 모든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골프 대중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골프장건설허가를 남발하던 89년과 90년도에도 정부는 각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의 동결을 주장하였다. 정부는 걸핏하면 일본과 우리를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도 골프 대중화정책을 강행할 만큼 소득 재분배가 되었나? 지난 4년동안의 소득재분배를 소상히 밝혀라.

- 지난 10월 7일 48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단체들이 골프대중화정책의 철회를 위해 관계법률의 개정과 피해사항을 조사해 달라는 것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실에 대한 총리 견해와 앞으로 정부의 골프장정책을 밝혀라.
- 물은 모든 국민이 매일 2리 이상을 마셔야만 하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다. 89년도 수도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어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물문제만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90년에는 수도물에서 발암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검출되어 또 다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그리고 지난 3월 대구에서 수도물 폐물 오염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난 3년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수도물 사고가 날때마다 정부는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했다. 그래서 지금 수도물을

정치부 기자 70인이 채점한 13대 국회의원의 성적표

(新東亞 특별취재반)

의정활동 평점

대면제는 「가장 실속이있는 발언을
가로 활동한 의원」을 먼저 1인
당하는 것은, 그
나타났다.

(1) 김대중(민주)
(2) 김광일(무소속)
(3) 노무현(민주·2표)
(4) 조세형(민주·18표)
(5) 이태원(무소속·12표)
(6) 박영국(민주·8표)
(7) 박찬홍(무소속·8표)
(8) 이철수(민주·8표)
(9) 이철용(무소속·8표)
(10) 이종환(민주·7표)

김대중(민주) 1표
김광일(무소속) 1표
노무현(민주) 2표
조세형(민주) 18표
이태원(무소속) 12표
박영국(민주) 8표
박찬홍(무소속) 8표
이철수(민주) 8표
이철용(무소속) 8표
이종환(민주) 7표

이태원(무소속)
김대중(민주)
조세형(민주)
이철(민주) 이철용(무소속)
노무현 조순숙(이상 민주)
김광일(민주) 김광기 박석우(이상 민주)
홍영기(민주) 김광일(무소속)
박태문(민주) 송인화(민주)
이철(민주)
이종환(민주) 김광일(민주)
박관용(민주)
박우현(민주) 박영국(민주)
김민기(민주) 이희찬(민주)
김덕룡 김순숙 신영국 황병태(이상 민주)
김종철 나용태 박광수(이상 민주)
김동원 신상우 이철우 황철환(이상 민주)
강구학 김광환 남재희 박삼지 심관주 홍세
균한 조순형 최낙도 허광남(이상 민주)
김동태 김우석 이장우 황낙우(이상 민주)
김기배 박철민 서상목 이진우 이태구 왕영
환태 한광록(이상 민주)

이태원(무소속)
김대중(민주)
조세형(민주)
이철(민주) 이철용(무소속)
노무현 조순숙(이상 민주)
김광일(민주) 김광기 박석우(이상 민주)
홍영기(민주) 김광일(무소속)
박태문(민주) 송인화(민주)
이철(민주)
이종환(민주) 김광일(민주)
박관용(민주)
박우현(민주) 박영국(민주)
김민기(민주) 이희찬(민주)
김덕룡 김순숙 신영국 황병태(이상 민주)
김종철 나용태 박광수(이상 민주)
김동원 신상우 이철우 황철환(이상 민주)
강구학 김광환 남재희 박삼지 심관주 홍세
균한 조순형 최낙도 허광남(이상 민주)
김동태 김우석 이장우 황낙우(이상 민주)
김기배 박철민 서상목 이진우 이태구 왕영
환태 한광록(이상 민주)

이태원(무소속)
김대중(민주)
조세형(민주)
이철(민주) 이철용(무소속)
노무현 조순숙(이상 민주)
김광일(민주) 김광기 박석우(이상 민주)
홍영기(민주) 김광일(무소속)
박태문(민주) 송인화(민주)
이철(민주)
이종환(민주) 김광일(민주)
박관용(민주)
박우현(민주) 박영국(민주)
김민기(민주) 이희찬(민주)
김덕룡 김순숙 신영국 황병태(이상 민주)
김종철 나용태 박광수(이상 민주)
김동원 신상우 이철우 황철환(이상 민주)
강구학 김광환 남재희 박삼지 심관주 홍세
균한 조순형 최낙도 허광남(이상 민주)
김동태 김우석 이장우 황낙우(이상 민주)
김기배 박철민 서상목 이진우 이태구 왕영
환태 한광록(이상 민주)

정부는 의료보험에 통합주의 방식을 채택하라



**보사부는 택이에 관한 종합방안을 제정하여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돕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라**

의약품의 과대, 허위광고 단속과 지도를 강화하라. (142)

냉동, 냉장식품의 세균과다검출과 관련 단속과 지도강화 촉구 (142)

AIDS예방을 위해 외국인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일반인에게는 자가수혈을 적극 권장하며 에이즈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라. (142)

취루탄의 인체에의 위해성 여부를 밝혀라. (143)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된 여성을 수용하는 부녀보호소를 준구치소형태로 유지하여 가족면회도 금지시키고 공신력있는 사회단체인사들의 신원보증에도 불구하고 귀가조치시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이다. 이 시설의 운영을 개선하여 이들의 인권보호 및 자활의 방안을 모색하라 (145)

원폭피해자치료 및 생계보조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 (145)

이미 상봉동에서 주민진폐증이라고 하는 세계최초의 공해병이 발생하여 박길래씨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또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공장주변 주민들에게 진폐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사부는 공장주변 2km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진폐증 검사를 실시하라 (146)

현행 아동복지법은 탁아소의 법적근거만 제시하고 있을 뿐 전국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동을 보호할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사부는 탁아에 관한 종합법안을 제정하여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돕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라. (148)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기존과 같이 항략적 효과만 극대화하여 매년 도시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보사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환경처는 민간단체의 환경보전운동을 지원하라



료보험에 적용시키도록 하라(150)

환경처가 월별 수질오염현황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표지점 몇몇 또는 평균치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고 수자원공사나 농어촌 진흥공사, 수산업진흥원등이 측정한 자료는 아예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처는 이러한 자료들을 공개하라. (155)

낙동강 폐쇄오염상태에서 보듯이 지방환경청의 지도 단속인원이 1년에 1번 한두번 배출업소를 방문해서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장비가동일지를 확인하는 정도로는 고의에 의한 불법방류행위나 과실에 의한 배출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처는 평소의 불법배출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군산의 TDI공장은 군산시민 15세 이상의 인구 중 63% 인 9만5천명에 달하는 시민이 TDI공장허가 반대서명을 해서 국회에 작년 11월에 청원을 제출했다. 그래서 청원의 심의를 12월초에 국회의장이 내무위로 넘겼는데 내무위에서 국회의장에게 다시 반송해 군산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들이 요구한 군산시장인책 문제는 오히려 그를 전주시장으로 영전시킴으로써 행

우리나라인구의 31%가 농어촌에 살고 있는데 농촌에 있는 병, 의원과 약국은 전국의 10% 밖에 되지 않는다. 수진율에 있어서도 농촌사람은 도시사람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의료의 혜택이 도시의 1/3 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 농촌 보험료를 60%나 인상한 것은 사회보장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태이다. 근본적으로 이는 의료보험조합의 운영방식의 문제로 현재의 조합주의 방식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150)

농촌이나 낙도등과 같이 외딴곳에서 묵묵히 의료사업을 펴고 있는 보건진료원들이 신분보장도 되지 않을 뿐더러 같은 경력의 공무원들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들의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농, 어촌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있다. 정부는 농특법을 개정하여 이들의 신분보장과 보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 (150)

가족계획사업이 무리하게 목표를 정해 추진하는 바람에 많은 여성들이 복강경수술 등의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병원에서는 임검사를 해준다고 하며 집단시술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보사부는 부작용 및 후유증치료는 물론 무리한 집단시술이 없도록 시술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가족계획정책을 모성보호적 차원으로 전환하라. (152)

주요 하천과 호수의 수질오염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전신망을 활용하여 전국의 수질오염 측정자료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종합, 분석되고수질오염 측정업무의 조정, 통제의 권한과 책임이 환경처로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은가 (155)

병원에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는 고가 수입장비를 무분별하게 들여오으로써 진료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고가 의료장비의 수입을 규제하고 이들장비의 의

정부가 이들과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TDI 공장건설 문제가 제 2의 안면도 사태로 확대되지 않게끔할 환경처의 대책은 무엇인가 (151)

환경처의 사회단체 지원경비중 환경보전협회에 해마다 1억원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들은 정부의 환경홍보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민간단체라 볼 수 없다. 올바르게 민간단체의 환경보전운동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계상하라 (150)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 일대에 있는 미군의 사격훈련장으로 인해 주변의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전반적인 주민공해병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146)

듀폰사 등 다국적기업에 의한 공해산업건설에 대한 환경처의 대책이 미진하다. 듀폰사의 이산화티타늄 공장부지 예정지가 어디인지 밝혀라. (142)

남녀고용평등법, 가족법 ... 등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987년 12월4일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여성이 고용 및 취업의 기회 등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고, 동일사업체내에서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작업장내 기혼여성을 위한 탁아소 설치 등을 의무규정화하여 여성이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88.12.15 박영숙의원 외 150명 의원의 발의로 개정안 제출
- 89. 2.20 노동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개정안 제안설명
- 3. 4 본회의 통과로 개정

가족법 개정

호주상속, 재산상속, 친권 및 친족의 범위 등 모든 가족관계의 남녀불평등한 관계를 현실에 맞게 평등하게 개정하여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의 정신을 살려 민주적인 가족생활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내용

- 88.11. 7 박영숙의원 외 152명의원의 발의로 개정안 제출
- 11. 9 박영숙의원과 김장숙의원의 소개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회장 이태영 외 5,630명의 청원제출)
- 12.26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족법 개정 청원소개
- 89. 2.28 가족법개정안 심사소위로 회부
- 12. 8 법사위주최 '가족법 공술인 초청회의' 개최
- 12.18 가족법개정 법사위 대안 통과
- 12.19 가족법개정 대안 본회의 통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20세기의 흑사병이라는 AIDS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88올림픽이 열려 국민들 사이에 AIDS예방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예방법으로 외국인, 외향선원 등 에이즈감염의 우려가 있는

집단의 항체검사를 의무화하고, AIDS 환자의 인권도 보호하자는 취지의 내용

- 88.11.11 박영숙의원 외 164명의 발의로 개정안 제출
- 11.12 박영숙의원 외 4인 소개로 「AIDS 추방을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의 청원소개
- 12.12 보건사회위 제1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 12.19 제144회 정기국회통과로 개정

탁아복지법안 제출

취업여성과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양육비용(탁아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여성의 평생, 평등노동권과 사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탁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사회복지법안

- 89.11.10 박영숙의원 외 69명 발의로 법안 제출
- 90. 2 민자당 3당합당 이후 민자당 '영유아보육법'과 표결처리에 민자당안이 통과됨

정부조직법 중 개정안(환경청의 「부」 승격안)

당시 보사부의 외청이던 환경청의 위상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없어, 부로 승격하여 부처간 환경업무 조절기능을 강화시키고 집행권한을 가져, 책임있고, 효율적인 환경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

- 89.10.31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박영숙의원외 69명이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됨

상수원 수질보호 특별법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골프장, 유흥음식점, 가두리양식장 등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 또는 오수정화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정신대문제및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소개

투자확대를 주요골자로 함.
89.12.7 제출

환경보전기본법안

정부의 환경정책기본법이 배제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규제문제, 환경오염자료의 공개문제,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방지 등 주요한 몇가지를 수정, 보완한 대안

- 89.12.12 제출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용부담법안

환경오염원인자가 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방지사업의 비용, 비용부담 원인의 범위, 비용부담계획의 결정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환경투자재원 확보도 제안

- 89.12. 8 제출
- 11.27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대안 통과

환경오염 피해배상법안

정부의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이 환경오염의 가해자인 기업과 피해자인 주민들을 대등한 관계로 전제해서 알선, 조정, 중재 등의 절차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피해사실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인과관계의 집중책임을 정부와 기업에 부담시킴으로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주민들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대안

- 89.12.12 제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각종 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법률적으로 강제조항으로 하여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법안

- 91. 4. 23 제출

자연환경보전법안

85년부터 5년간 실시한 자연생태계 전국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연생태계 보존구역을 법으로 지정해 더이상의 개발과 훼손을 방지하며 그린벨트를 확대하여 도시주변의 삼림, 녹지는 물론 도시안의 공원녹지와 가로수, 주거지역의 생활녹지, 북한산 은행나무와 같은 전통문화재도 함께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91.10.14 제출
- 11.27 대안 통과

1. 가족법 개정 청원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와 한국여성연합 가족법개정 특별대책위 청원소개(88.8.11)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에 관한 청원

88올림픽을 맞아 외국인의 AIDS검역을 강화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AIDS 추방을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의 청원을 소개(88.11.12)

3. 정신대문제에 대한 청원

정신대 추모를 위한 위령탑 건설 및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요구 등을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윤정옥)」에서 청원하고 이를 소개함(91.7.18)

4.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민법규정 폐지에 관한 청원

우리고유의 미풍양속도 아니며 과학적 근거도 없는 동성동본 금혼조항 민법 809조 제1항을 폐지해주시기 바라는 내용의 청원을 「가정법률상담소(이태영)」에서 하고 이를 소개함(91.9.10)

5.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

성폭력에 관계되는 여러 법조항을 한데 모아 합리적으로 고치고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단일 특별법의 제정을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김계정의 4인)」가 청원하고 이를 소개함(91.10.30)

아내의 권리를 남편과 함께 딸의 권리를 아들과 함께 어머니의 권리를 아버지와 함께

박영숙 의원은 바로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박영숙 의원은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탁아복지법 제안 등 이 땅에서 소외된
2천 2백만 여성의 권익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여성이 있는
정치를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1988년 4월 13대 국회의원 선거지원유세 (여의도광장)



양심수 석방 촉구대회 (1988년 10월 23일)

- 87 11. 23 평민당 입당 부총재겸 대통령선거대책 부위원장으로 임명됨
11. 29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서울 여의도 유세장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 지원 연설



87. 11. 28 박영숙 부총재 입당환영식

- 88 1. 8 정치범 석방 및 사면 복권 문제 항의단의 일원으로 법무장관 방문
3. 18 평민당 총재권한대행
4. 1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책위 위원장
4. 18 광주거거 조사단, 12. 16 대통령 부정선거 조사단, 전두환씨 및 그 일족에 대한 부정비리조사단
4. 26 전국구 의원 당선
5. 4 서울 택시기사 농성사태 진상조사단장
5. 7 임시전당대회에서 부총재로 재추대
5. 11 양심수 석방 촉구단장으로 국무총리 방문
6. 8 국무총리, 통일원장관 방문 6. 10 회담 대비 4당간 통일협정기구 구성제의
6. 10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6. 20 최루탄 제조 및 사용실태 조사위원회 위원장
7. 8 142회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사회, 문화분야)
7. 12 부산일보 파업사건 진상조사단장
8. 2 조선대학교수 농성사건 진상조사단장
8. 4 원전레이온 직업병발생 진상조사단장
8. 8 산업재해 및 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
8. 19~23 김대중총재와 아키히데도 5주기 기념행사 참석차 필리핀 방문
8. 24~30 CCA(아시아교회협의회) 홍콩회의 참석
8. 31 교회여성연합회 주최로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안' 연구모임에 참석



아키히데도 5주기 기념행사 참석차 필리핀 방문



88. 7. 30 충북 꽃동네 방문(오신부님과과의 간담)

- 9. 3 에이즈 추방을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에이즈추방을 위한 범시민 대토론회'에 참석.
- 9. 12 평민당 최루탄 대책위원회 단장으로 신구전문대 신두섭군 최루탄 부상사건과 관련해 내무부장관 방문
- 9. 14 원진레이온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대표 간담회
- 9. 15 여성단체 대표자들과 정기국회의 의정활동 간담회
- 9. 27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회원들과 의료보험, 에이즈, 진폐증 문제 협의
- 10. 23 대학로 구속자 전원석방대회 참석
- 10. 25 최루탄 피해자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 10. 27 에이즈추방을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 주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 10. 27 80년도 언론탄압조사위원회 위원장
- 11. 7 가족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1. 8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대회 참석
- 11. 10 창당 1주년기념 '여성정책과 평화민주당' 정책 토론회 주관
- 11. 1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 제출
- 11. 28 월간조선 '개방사회와 나'에 관한 토론회 참석
- 12. 6 YMCA주최 '여성취업-높은 벽, 좁은 문' 제하의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 12. 7 대전시민회관에서 열린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 12. 8 전주대학교 진상조사단장
- 12. 15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제출

89

- 2. 27 '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한 촉구 성명과 부시 국회 본회의 연설 불참
- 3. 8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



미국방문시 키신저 전 국무장과 면담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아르바토프 美·加연구소장과 한·소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



일 사회당 당수 도이다까고 면담



- 5. 15 146회 대정부질의(사회문화분야)
- 6. SI(사회주의국제연맹), SIW(사회주의국제여성연맹)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
- 7. 15 경찰 강간피해자 감정순례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선거공판 참석
- 7. 21 전교조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중재위원회
- 9. 26 핵발전소 11,12호기 건설반대 공동선언문 발표
- 10. 13 가정법률상담소주최 '가족법개정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 10. 17 탁아법 관계로 지역탁아소 실무자및 교사 간담회
- 10. 18 한국여성단체연합회주최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
- 10. 25 한국여성단체연합회주최 '가족법여성대회' 참석, 평화행진
한국에서 개최된 CCA(아시아교회협의회) 동북 아시아 회의 참가하여 강연
- 10. 28 참교육을 위한 걷기대회 참석
- 10. 30 5공청산과 광주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 선언
- 11. 1 여기자 간담회(탁아법관계)
- 11. 2 서울민통련 여성교실에서 '여성과 정치' 제하의 강연
- 11. 6 CPD(유엔아동인권기금) 회원으로 창립총회 참가
- 11. 8 공해추방운동연합 여성위원회에서 환경문제 강의
- 11. 9 보사위 유지사건 실태 조사위 위원
- 11. 10 탁아복지법안 제출
- 11. 19 지역탁아소연합회주최 '탁아문제공청회' 토론자로 참가
- 11. 24 집중토론 '여성'에 출연해 가족법개정 토론
- 12. 1 여성신문 창간1주년 행사참석
- 12. 7 상수원수질보호특별조치법안 제출
- 12. 8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용부담법안 제출
- 12. 9 기독교방송에서 가족법문제 방송
- 12. 12 환경보존기본법안, 환경오염피해배상 법안 제출
- 12. 18 전국여성농민위원회 결성대회 참가
- 12. 19 가족법 개정 통과

- 2. 10 민족문화추진회의 여성문화분과위원회 무크지 출판기념회 참석
- 2. 16 광주 YWCA 조아라장으로 최수기님 출판회 축하
- 2. 22 '지방의회 선거법상 여성비례제' 채택문제로 여기자 간담회
- 2. 26 BPW (전문직 여성클럽) 춘천의식의 밤 참석
- 3. 3 JPIC 세계여성대회에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기조연설
- 3. 13 '환경관계법안' 관계로 환경처 출입기자 간담회
- 3. 14 탁아심사소위원회 위원
지방의회 선거법 관계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교회여성연합회, 여성유권자 연맹 관계자들과 간담회
(여성단체장 국회방문하여 여성비례제 및 지방자치 선거실시 요구)
- 3. 20 비둘기회에서 여성문제 강의
관악시민교실에서 '여성의 지위향상 어디까지 왔나' 제하로 강연
- 3. 24 산물노동문화원에서 '한국정치현실과 여성' 제하로 강의
- 3. 25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 부모가 일어난 사이 불이나 질식 사망한 권용철, 해영 어린이 위령제 참석
- 3. 27 히로시마 방송국 '원폭문제' 인터뷰
- 3. 29 한국여성노동자회 탁아소 방문하여 직장탁아소 문제 협의
- 4. 17 평민당 정책위주관 '공해피해의 현황과 대책' 정책토론회 사회
- 4. 18 한국여성단체연합 탁아문제특별대책위 주최 탁아문제 세미나 토론회로 참석
- 4. 21 김대중총재 국정보고대회 연사로 대전대회 참석
- 4. 22 환경단체 주최 지구의 날 기념 시민걷기대회 참석
- 4. 26 동양화학 TDI 군산공장 문제로 군산시민 대표 간담회
- 5. 5 비상대책위 위원장
- 5. 8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지방의회선거와 여성참여 방안' 토론회 토론회로 참석
- 5. 9 광주민중항쟁기념출판회 참석
- 5. 16 미국 부통령후보 제럴딘 페라로 초청강연회 주관
- 5. 29 연천기념대회에서 공로상 받음



1990. 5. 비상사국대책위 위원장



1990. 일산 수해시 수재민 방문



제럴딘 페라로 초청 강연회



- 6. 2 탁아법문제로 여성단체 간담회 (지역탁아소연합회 등)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고용문제 공개토론회 참석
- 6. 4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과학연구협회 주최 '폭적인 환경참조를 위한 생태계보전' 제하의 토론회에 참석
- 6. 5 스위스 베른 방송국과 통일문제 인터뷰
환경의 날 기념 공추련, 환경과 공해 연구회 공동 주최 '오늘의 환경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에 토론회로 참석
- 6. 12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 토론회에 토론회로 참석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21주년행사 참석
- 6. 14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주최 '팔당호 준설공사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의 문제와 대책에 관한 공청회' 토론회로 참가
- 6. 15 CDP (유엔 아동, 인구개발 기금 한국의원 연맹) 환경문제에 관한 대토론회에 토론회로 참석
- 6. 18 임수경씨 면회
MBC동서남북 팔당굴재채취로 인한 상수원오염 문제로 인터뷰
- 6. 19 선교교육원 주최 기장여교역자회 교육에서 강연
- 6. 2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및 60개단체 주최 '과소비 추방범여성대회' 참석
- 6. 22 '팔당준설현장 현지조사' (단장: 박영숙, 민간 환경단체 관계자 동행)
- 6. 25 기독교사회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 6. 29 하와이대 소정희교수와 연담 (의회활동분석차)
- 6. 31 동양화학 TDI 군산공장철거추진 특별대책위 관계자들과 현지 간담회
- 7. 6 설악산 자연파괴현장 조사단장으로 현지조사 (환경기자 동행)
- 7. 9 방송관계법 개정 반대토론회 참석, 국민연합, 평민, 민주 공동주최
- 7. 20 수원 소피아당 주최 '탁아입법과 여성의 정치활동' 강연
- 7. 31 인천 앞바다 (영종도) 유조선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피해 진상조사단장으로 현지조사

- 8. 14 서울시 정수장 수질관리 조사단장으로 현장조사 (민간환경단체 동행)
- 8. 24 '자연의 친구들' 주최 설악산 자연보전에 관한 공청회 토론회로 참석
- 8. 26 민간환경단체 대표와 환경학자들로 구성된 '환경보전을 위한 25인 회의' 주최 환경문제 대토론회에 토론회로 참석
- 8. 28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 상담실 설립하여 대표됨
- 8. 31 동양화학 TDI 군산공장 이전 청원 조사단장으로 현지조사



서독 전 수상 빌리브란트 내한



김대중 대표 국정정보고대회 창조연설



'녹색의 전화' 개설

- 9. 12 수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경기도 고양군 현지 조사
- 9. 20 대전 YMCA MBC주최 "대청호 수질오염의 문제와 대책" 토론회에 참석
- 10. 2 경남 양산군 폐기물 매립장 건설반대 현장조사
- 10. 3 경남 함안군 폐기물 매립장 건설반대 현장조사
- 10. 19 팔당 상수원 굴재채취 시험준설 현장 재조사
- 10. 25-26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수질보전학회 주최 "21세기를 향한 수질보전정책 및 기술발전 전망" 토론회 참석
- 11. 5 경기도 가평군 골프장 건설반대 현장조사단장으로 현지조사
- 11. 5 강원도 춘성군 그린벨트 훼손 골프장 현지조사
- 11. 9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반대 현지조사
- 11. 15 그린벨트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그린벨트 규제완화 반대 시민대회' 참석하여 강연
- 11. 21 서울대 환경대학원, 서울시 주최 '서울의 환경 보전, 현황과 대책' 토론회 참석
- 11. 24 제151회 국회에서 대정부질의(사회문화)
- 12. 22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팔당호 시험 준설저지 특별대책위 주최 "팔당호 시험준설 조사결과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로 참가



91

- 1. 16 MBC TV 아침의 창에 출연하여 '여성과 지방 자치제' 제하의 토론
- 1. 25 '의원윤리강령작성위원회' 위원장
- 3. 25 대구 폐물유출사건 조사단장으로 현지조사 (민간환경단체 동행)
- 4. 10 평민당 기초의회여성의원 당선자 축하회 주관
- 4. 16 위은물 대책위 위원장, 팔당상수원현지조사
- 4. 22 인천 계양산삼리기 범시민운동협의회 주최 지구의 날 기념 걷기대회 참석
- 4. 2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제출
- 4. 30-5. 5 IPU(국제의원연맹) 한국대표단으로 평양 방문
- 5 교회여성연합회에서 북한방문보고회
- 5. 13 신민당 최고위원
- 5. 14 소래포구어민 생존권 및 피해보상에 대한 진상 조사단장
- 5. 29 소래포구어민피해 현지조사
- 8. 11 대전배달환경연구소 창립 세미나에서 '환경오염과 지방자치' 제하의 강연
- 8. 16 금강제2휴게소 건설관련 조사단장으로 현지조사
- 8. 26 김부남 석방추진위원회와 함께 담당판사 면담



금강산에서

92

- 9. 17-10. 3 김대중 대표와 소련, 미국, 독일, 폴란드 등 4개국 순방 및 남북유연동시가입 유엔회의 참가
-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준비차 여성단체대표 간담회
- 10. 28-29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 주민시위 조사단장으로 현지조사
- 11. 9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반대 조사단장으로 현지조사
- 12. 12 환경보전 대전시민연합 창립대회 축사
- 12. 12 환경기자클럽이 선정한 '올해의 환경인' 상 수상

- 1. 16 핵폐기장 건설반대 118인 선언
- 1. 27 한국여성신학자총회에서 '통일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여건' 강연
- 3. 7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상' 수상
- 3.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전문위원
- 4. 14 매일경제신문 생활경제 강좌에서 '여성과 사회 의식' 제하로 강연
- 4. 16 한국부인회 주최 '여성과 정치' 토론회에 토론회자로 참석
- 4. 21 YWCA 창립 70주년기념 폐널 중-여성운동체로서의 Y-제하의 주제발표
- 4. 22 지구환경서약캠페인-유엔환경개발회의의 관계-
- 4. 27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법률안 심의회의 참가
- 4. 29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유권자연맹 등 4개 연합체 주관 "14대 여성 의회 진출평가와 향후 방안" 토론회 참가.
- 4. 30-5. 3 유연환경개발회의 일본민간단체 주최 아시아 지역회의의 참가.



평양방문



평민당의 보배

송정숙

한 집단에게 스타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효할 수 있는가를 젊은 국회의원 노무현씨는 실증해 주었다. 놀랍게도 그만한 인물을 휘하에 거느렸다는 것만으로 그가 속한 집단의 보스까지 빛이나 보였다. 그런 것이 새 「스타」의 효용성인 것 같다. 평민당에서 그런 역할을 기대할만한 누가 없을까? 필자에게 추천하라면 적당한 사람이 있다. 박영숙 부총재이다.

대저 회원이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비추어 본다면 박부총재는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정을 좌우하는 정당에서 내세우는 인물이다. 성차별주의 문화로 고착된 TV앵커 고르듯 생각할 일은 아니다. 동시대를 이해하는 개화한 의식의 주인이면서 만능처럼 부드럽고 모성적 보호 본능이 강해보이는 사람. 박부총재는 그런 인상이다. 실제로 다른 야당에서는 「또하나의 박영숙」을 탐색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평민당은 수종의 보배를 잘 가꾸는 것이 좋겠다. (이하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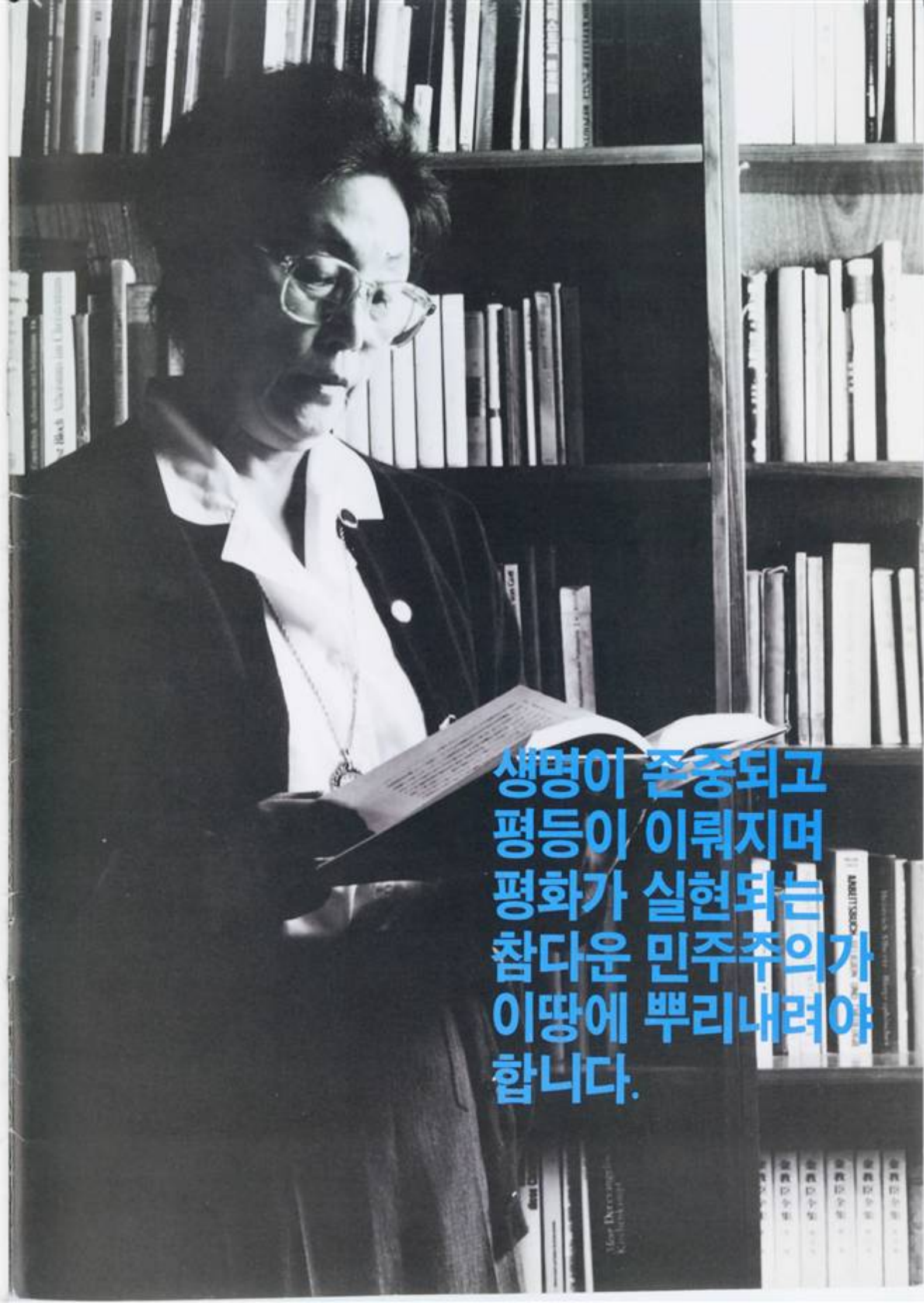
그런 박부총재의 이미지를 평민당은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조직속에서 일하는 훈련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 여성이다. 그래서 많은 여성의 경우 허명퇴의 실력이 공허하여서 실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YWCA라고 하는 구미식 인력양성기구에서 자란 박부총재는 그런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 것이다.

자금은 여성 정치지도자의 전성기이다. 체제에 반기를 들고 민중의 힘을 역동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역사의 무대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여성들의 출현을 어디서나 고대하는 시대다. 황색리본의 코리에 이어 부도가 회교국 - 파키스탄의 첫 여성수상으로 떠오를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재야활동으로 적공한 바가 만만치 않으면서 평민캠프에 최후자격으로 진입하여 양대 선거때에는 김장 풍악이 하는 주부 처럼 뛰어들어 전일 굶은 일을 몸사리지 않고 해낸 뒤에 재야 동지들을 영입하는 주역을 해낸 박부총재는 시대에도 부합한다.

오늘 우리가 박부총재를 생각하는 은밀한 이유가 또하나 있다. 기왕에 장해진 진용을 전면 교체해 가며 광주특위청문회에 입하는 평민당에게,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바늘처럼 예리하게, 비록 야심이 있더라도 비단보자기에 잘 싸서 간수했다가 적절한 시기가 무르익지 않으면 경솔하게 펼쳐지 않는 박영숙 부총재같은 지혜를 기대한다. 유난히 눈이 밝고 피가 많은 김총재라. 언제 이 「보배」를 출중하게 활용할지 모를 일이다. 유혈이 낭자하게 마련인 경쟁의 현장을 슬기롭게 피해가며 가볍게 주역의 의자에 앉게 되기를 우리는 박영숙씨에게 기대한다. 노란빛깔의 당색을 휘날리는 제일야당에서 전국구 후보의 선두를 장식하며 탄생한 여성정치인에게서가 아니라면, 우리 여성계가 언제 그런 것을 기대하겠는가.

-88. 11. 18 서울신문 칼럼중에서



생명이 존중되고
평등이 이뤄지며
평화가 실현되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이땅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인간과 환경이 모두 존중되는 희망찬 사회

소외된 여성,
소외된 생명,
소외된 서민 대중을 위하여